

농특위, '농어촌형 통합돌봄 정책설계'를 위한 제2차 회의 개최

- 24일 제2차 회의 개최...통합돌봄 1차 현지 실사 결과 보고 및 지역 활동 사례 발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24일(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방안 마련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6월에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TF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시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의 조미형 박사가 통합돌봄 정책연구 1차 현지 실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연구진은 복지, 보건, 농촌 영역을 포함하여 '다-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협약을 추진한 농촌공동체과까지 청양군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어 이정영 TF 위원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주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안군 '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며 현장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 맞춤형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위원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형 돌봄센터 설립을 통한 농어촌 지역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안건을 공유하고, 이번 통합돌봄 TF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안건 구체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향후 계획과 함께 추가적인 현장 방문 추천 대상지를 검토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은정 통합돌봄 TF 단장은 "농어촌형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지자체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도적 칸막이를 허무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돌봄 회의에서 논의된 현지 실사 결과와 논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농어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건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촌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모델 설계가 필수"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논의가 풍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통합돌봄 정책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진호	02-6260-1221
		담당자	전문관	윤석민	02-6260-1233

